수사기관, 尹 소환 잇단 통보… '내란죄' 수사 속도

공조본, '18일 출석요구' 우편 발송
검찰 특수본, 1차 불응에 2차 통보
박근혜 이어 두 번째 피의자 신분
형사재판·탄핵심판 동시 진행 전망

우원식 국회 의장이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창석 위원, 이나영 위원, 배형원 위원, 김석우 위원, 우원식 국회 의장, 김형원 위원, 이석범 위원.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하고 수사 기관이 소환을 통보하면서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6일 윤 대통령에게 18일 공수처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이 검찰과 공수처 중 어느 곳에서 조사를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공조본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찾았으나 실패했다. 다만 등기 우편을 통해서도 출석요구서를 발송해 둔 상태라 출석 요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공조본은 18일 오전 10시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로 출석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공조본의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도 이날 1차 소환 통보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줄 것을 재차 통보했다. 출석 요구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5일 오전 10시께 출석을 요청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특수본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됐으며, 검찰에서 정식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이 이번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된다.

특수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수뇌부에 대한 조사와 신병 확보 등을 진행한 만큼 사건 '핵심'인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판단하고 계엄 선포와 관련된 군 관계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여인형 전 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구속됐다.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구속됐으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공조본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보하는 등 속도를 내면서 탄핵심판과 함께 형사재판도 진행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돼 있지만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소추가 가능하다. 수사기관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치고 혐의가 구체화되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재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윤 대통령이 해당 헌재법 조항을 근거로 심판 중지를 헌재에 요청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해당 조항에서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강행 조항은 아니다. 헌재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 지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에 윤 대통령이 헌재에 심판 중지를 요청해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민주 "23~24일 헌법재판관 3명 인사청문회"

국회 추천 몫… 與 잠정합의
30일 임명동의안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과 24일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여당과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인청특위) 야당 간사를 맡은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를 23, 24일날 개최한다는 점에서 (여당과)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만 여당은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상황이라 내부 보고를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시간을 좀 달라는 요청이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17일 인청특위 전체회의를 통해 청문계획서 채택 등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이틀 안에 진행하는 것에 대해, "2020년 선관위원 선임은 하루에 2명씩 계획서 채택부터 보고서 채택까지 하루에 끝낸 선례도 있어서 그 부분은 여야가 특별히 하자 없는 후보자라 생각한다면 3명에 대해 이틀간 청문회를 개최하는 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재적 의원 절반인 150명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임명동의안은 통과된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을 추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여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추진하기 위한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소추위원단 구성을) 3·3·2·1로 했다. 1당과 2당, 국민의당, 비교섭단체(추천 방식)에 준해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해서 내란특위는 의장과 상의해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인청특위 위원장에 3선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고, 국민의힘에서는 5명이, 민주당에서는 7명이 이름을 올렸다. 비교섭단체 몫으론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들어갔다. 여당 간사는 곽규택 의원, 야당 간사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서울=김선욱 기자

한 권한대행 "중기 두텁게 지원… 도전 극복할 수 있어"

'중견기업인의 날' 참석
대통령실 경제 업무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6일 "정부는 중견기업이 성장하는 데 드는 부담은 덜어주고, 필요한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중견기업인의날에 참석해 축사에서 "중견기업은 대한민국의 대표적 성장기업으로,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과 소부장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중견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1.3%에 불과하지만 수출의 18%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용과 매출의 14% 내외를 차지하고, 매년 25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가교역할을 수행해 '튼튼한 성장사다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한시법이던 중견기업특별법을 상시법으로 바꿔 지원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며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또한 범정부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도전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지만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인들이 마음껏 세계를 무대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많이 투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실로부터 경제 분야 업무를 보고받았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신중범 경제금융비서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배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주 중 사회·과학기술·저출생대응수석 등 다른 수석실의 업무보고를 계속 받을 예정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계엄 다음날 새벽 참모진 34명 용산행"

민주 진상조사단 "경위 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2차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날 육군본부 소속 장성급·위관급 장교 34명이 용산행 버스에 탄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이날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일 새벽 합동참모본부 내 계엄상황실로 출발한 버스의 탑승자는 총 34명이다. 탑승자는 육군본부 핵심 직책을 맡고 있는 장성급 장교 14명, 영관급 장교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탑승자들의 직책은 2017년 기무사령부가 만든 계엄사령부 편성표에 포함된 육군 본부 직책과 대부분 일치한다.

최상위 간부인 참모장을 맡는 육군 정보작전참모부장과 기획조정실장을 맡는 육군 기획관리참모부장이 모두 4일 새벽 버스에 탑승했다.

계엄사령부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로 구성되는데, 10명의 실장·처장 가운데 2명을 빼면 2017년 계엄사령부 편성표와 동일하다. 계엄사령부의 비서실장·정보처장을 각각 맡는 육군 비서실장·정보차장만 탑승자 명단에 없다.

정보차장은 탑승자 명단에 없지만, 정보과장(대령)이 대체자로 탑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탑승자 가운데 계엄사령부 2부8처의 장 10명 중 9명이 포함됐고, 2017년 기무사 계엄문건 계엄사령부 편성표와 90%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육군본부 소속 부장들과 간부들이 4일 새벽 3시 버스에 탑승한 사실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대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답변에서 확인됐다.

서울=김선욱 기자

'국회 병력 투입'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병력을 보낸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구속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6일 오전 10시께부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곽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특수전사령부 산하 제1공수여단과 제3공수여단, 707특수임무단을 국회에 투입한 인물로 지목됐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으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3곳,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밝혔다.

뉴시스